#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밑그림… 초점은 지방재정

## ‘통합시’ 명칭 단서 조항 등 통해 변경 가능
##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권한 이양
## 교육자치, 시·도 교육감 협의 뒤 조문 마련

강기정(가운데 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가운데 오른쪽)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광주시·전남도 공직자들이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 참석해 공동발표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법안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대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광주·전남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지방권한 이양이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시·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구성 이후 광주·전남 연구원, 부처 협의, 시·도 간 조율을 거쳐 통합의 초석이 될 특별법안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법안의 구성은 최종 손질을 앞둔 가운데 총 8편 24장 317개 조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날 현재까지 수 십 개의 조항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의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다.

전남도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에 대해 시·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법안 발의 과정 또는 제정 전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서조항에 ‘통합시장이 통합시민과 통합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민의 요구에 따라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내포해 둔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대와 통합에 따른 강력한 인센티브다. 제1호 광역통합 지방정부인 만큼 이에 합당한 재정 규모와 혜택을 특별법 형식을 빌어 중앙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즉 ‘1+1=2’가 아닌 ‘3’ 이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운영발전기금을 만들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전지역을 균일하게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키워드는 AI·에너지·반도체·문화관광이다. 미래먹거리 산업에 있어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달라는 것이 핵심 골자다.

실제 전남도가 추구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이익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특별법에 담기도 했다.

이 밖에 경찰 자치·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조문도 담고 있다.

20개 조항으로 채워 질 교육자치 부문은 현재 진행중인 시·도 교육감 간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채운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금명간 법안을 최종 마무리한 뒤 16일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재정 지원에 대한 핵심 조항들이 주로 담긴 점을 감안해 국회 예산·재정분야 전문가인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 7월1일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공식 출범시켜 행정통합의 새 역사를 연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종 점검을 통한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광주·전남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 갈 근간인 만큼 고심을 거듭하며 법안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중앙·지방 6대 4가 광주·전남통합정부 재정분권의 핵심”

## ‘새로운광주포럼’ 광주서 첫 타운홀미팅

광주·전남 시.도통합 특별법에 중앙과 지방 재정 배분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정해 실질적이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광주포럼은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타운홀미팅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과거 시도 통합 사례와 현재 경과 필요성을 설명한 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광주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장과 최형식 전 담양군수·박제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문 구청장은 현행 균형특별발전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도 통합 특별법에 지역 현실을 반영한 균형발전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구청장은 “특별법에 담아내거나 정부에 요구할 첫 번째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라며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구조는 수도권 중심적 기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역의 배분액은 최하위 수준으로 균형발전 취지가 무색하다. 수도권의 비중은 지난 2021년 20.34%에서 지난해 15.82%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인구, 면적, 지방소득세, 재정력지수 등 2006년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면서 재원 배분 정보 또한 비공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 의원도 “광주전남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서 5%포인트가 부족한 39%에 불과하다. 전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23%에 그친다”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비율을 ‘6대 4’로 나눠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나왔다.

최 전 군수가 “국비와 지방비의 재정 배분을 최소한 6대 4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 구청장이 “이번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6대 4 배분을 추진했으나 못했다”고 답했다.

또 “7대 3조차도 되지 못한 재정 배분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8대 2 수준으로 벌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가장 큰 것이 균형발전과 재정 부분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 전 군수는 나아가 “ 통합된 지방 정부가 과세권과 세출권을 가져가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는 조세 법률주의에 막혀 관련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 위임하지 않는 한 징수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 통합 지방 정부가 징수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관한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뉴시스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새로운광주포럼이 주최하는 토론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지선 7선’ 전직 군수가 밝힌 광주·전남 통합 7개 원칙은

## 최형식 전 담양군수, 행정통합 관련 첫 타운홀미팅서 공개 제안
## 자치권, 재정자율, 과세권 등 강조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풀뿌리 자치 7선(選)을 지낸 70대 전직 군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7가지 원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형식(71) 전 담양군수는 13일 ‘광주·전남 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새로운광주포럼 주최 첫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담아야 할 7대 원칙을 공개 제안했다.

최 전 군수는 3선 전남도의원과 징검다리 4선 담양군수를 지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 전 군수는 우선 ‘분권국가형 통합 원칙’을 강조했다. “광주·전남 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 운영 체계를 주권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통합은 단순 행정구역 합침이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치정부 설계가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에 방점을 찍었다. 최 전 군수는 “통합정부가 자치입법권을 가져야 인구·자본·기술 유입 정책이 가능하다”며 “단순 통합 만으로는 권한이 늘지 않는 만큼 특별법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과세권과 세제권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 지방정부가 자체 과세권과 세입 운영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담양을 단적인 예로 들며 “자체 관광세를 부과한 뒤 지역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조세법률주의 예외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배분 6대 4 구조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최소 6대 4로 조정해야 실질적 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맞물려 광역정부 비대화(권한 집중) 금지 원칙도 언급했다. “통합 광역정부가 시·군·구 권한을 빼앗거나 직할기관 남발로 ‘특정인 자리 만들기’를 해선 안된다”며 “기초정부가 ‘하청정부’가 되지 않고 독일, 스위스처럼 수평 관계가 이뤄지고 기초정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정부 권한 침해 금지 원칙’으로도 해석되며 “광역정부는 슬림하게 다이어트하고, 기초정부는 확대해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최 전 군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밖에 “생활권·권역별 특성화와 다양성 존중이 지방자치의 본질로, 통합이 획일화나 중앙 집중으로 흐르면 안되고, 시·도민 주권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전 군수는 끝으로 “통합은 단순합병이 아니라 연방형 분권국가를 모델로 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총리 주재 공동선언도 필요하고 통합 이후 중장기 비전을 위해 법적근거를 가진 상설 통합 비전·전략기구 설치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